

한국YWCA 제2차 운동이슈 브리핑

한국YWCA 연합회 성평등X기후운동팀 팀책임 | 남궁혜경

01

한수원 신규 핵발전소·SMR 부지 선정 관련



- 발표 일자** | 2026년 6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부지 선정 발표
- 선정 부지** | 경북 영덕군(대형 핵발전소 2기), 부산 기장군(SMR 1기 실증로)
- 문제점** | 주민 수용성 및 사회적 합의 배제, 일방적 강행

01

문제점 1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도, 다중위험

POINT 01.

세계 최고 밀집도 위험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도
- 30km 반경 내 382만 명 거주 인구 밀집 위험지역에 추가 핵발전소 건설 추진

POINT 02.

노후 원전 복합 리스크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진행 중 동시에 해체 작업 병행
- SMR 추가 건설로 복합 위험 가중
- 안전 검증 없는 다중 위험 동시 노출

02

문제점 2 - SMR의 기술적 허구성과 핵폐기물

문제점

- 충분한 기술·경제 검증 없이 주민 안전 담보 실험 강행
- 미국 뉴스케일 사업 해지 등 글로벌 SMR 상용화 실패 전례
- SMR, 대형 원전 대비 핵폐기물 2배~30배 배출(스탠퍼드대 발표 2022년)
- 핵폐기물 처리 대책 없는 SMR 도입은 지역, 미래세대 희생 담보로 진행
- 기술 허구성과 폐기물 위험성에 근거한 부지 선정 즉각 철회해야 함

03

문제점 3 - 영덕 부지 면적 과다 책정과 '추가 증설' 의혹

부지선정 반대 역사

2015년 주민투표 91.7% 반대 역사

- 영덕 주민들이 압도적 다수로 핵발전소 부지 선정에 반대 의사 표명
- 민주적 절차를 통한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지 선정 강행

추가 건설 의혹

확보 부지 면적 과다 및 추가 증설·SMR 단지 조성 의혹

- 선정 부지 면적이 실제 필요 규모 대비 과다 책정
- 향후 추가 증설 및 SMR 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포석 의혹 제기



에너지 식민지화

- 지역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중앙 권력이 일방적으로 부지 결정
- 특정 지역에 핵발전 위험을 집중시키는 구조적 불평등
- 주민 동의 없는 에너지 정책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 과거 삼척·영덕 주민 승리 사례를 교훈 삼아 탈핵진영 연대 운동 필요



절차 미완료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법적 절차 남음



주민 승리

삼척·영덕 주민
승리 사례



연대 강화

연대로
부지 선정 저지

1.일시 : 2026. 6.27(토) 2시-4시
2.장소 : 보신각

*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 결의대회, "그만 짓자 핵발전소, 부지 선정 중단하라!"
 ✓ 일시: 6월 27일(토) 오후 2시 - 4시
 ✓ 장소: 보신각 - 청와대

*12시 30분부터 보신각에서 단핵서국기도회가 있습니다.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 결의대회

2026.6.27.(토) 14:00* 서울 보신각

성평등X기후정의운동

기후위기와 여성의 몸

01 데이터가 증명하는 위기: 기후위기와 여성의 몸

기후 변화가 여성암 위험 높인다...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기사입력 2025.07.01 09:00

기후 변화가 유방암을 포함한 여성암 발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5월 27일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17개국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분석한 결과,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여성암(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유병률이 평균 10만 명당 173~28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경향이 단순한 기온 상승보다는 고온, 자외선, 대기오염 등 기후 요인이 내분비계를 자극하거나 환경 독소 노출, 세포 기능 변화, 의료 접근성 저하 등과 같은 복합적 요인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됐다.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더 높은 증가율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국가별 사회·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구온도 1°C 상승 시 여성암 유병률 인구 10만 명당
최대 280건 증가(미국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교 연구진 2025)

난소 세포, 에스트로겐 체계의 고온 민감성 확인

온도상승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여성 내분비계 자극

01

데이터가 증명하는 위기: 기후위기와 여성의 몸




 기후에너지데이터뱅크

[데이터센터](#) | [뉴스](#) | [칼럼](#) | [MICE센터](#) | [탄소제로클럽](#)

HOME > 뉴스

[기후 리포트] 폭염, 태아 건강까지 위협한다...조산 1.41%가 폭염 탓

13개국 더운 계절 출산 3660만 건 분석
폭염은 진통을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
저소득층·미혼모, 여아 임신 때 더 취약
서울에서 비슷한 연구 결과 발표되기도
냉방시설 접근 지원하는 보건 체계 필요

2026.05.28 15:39:41 | 댓글 0 |   

- 13개국 3,660만건 분석 폭염 기간 임신부 조산 위험 증가극한 폭염에서 조산위험 3.8% 증가
- 우리나라 : 81만3,820건 분석 임신 기간 전체에서 열지수가 약 5.5°C 상승할 경우 조산 위험은 최대 3.3% 증가 (2019년)
- 폭염이 진통을 촉발하는 역할을 함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여성 건강권 침해 문제

02

이윤 중심의 먹거리 유통체계

환경호르몬 유입 경로

플라스틱 포장재 통한 환경호르몬 유입

캔 코팅제(BPA 등) 통한 독성 물질 노출

환경호르몬 → 여성질환 발병률 증가 연결

악순환 고리: 유통체계→노출→질환 심화

먹거리 유통과 온실가스

푸드 마일리지: 장거리 운송 온실가스 배출

먹거리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 1/3 차지

기후위기 심화 → 여성 건강권 위협

먹거리 체계의 이윤 중심 구조가 악순환 지속시킴

03

정책적 사각지대와 국제사회 트렌드

국내 정책 현황

지방정부 탄소중립 계획 내 젠더 관점 부재

여성 건강권 정책 반영 미흡

기후위기 대응에서 재생산권 배제

성평등 기후정책 전환 시급

국제사회 트렌드

UNFCCC 젠더 행동 계획 수립·이행

WHO, 임산부 보건·재생산권 기후정책 포함

선진국, 기후-여성건강 연계 정책 추진

젠더 포함 기후정의 국제 기준 확산

시민사회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

한국YWCA연합회 이슈브리핑

공익법인 제도개선운동

발표: 한국YWCA연합회 비전기획팀 팀책임 박동순

1.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1) 현황

- 법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재 중단된 상태. 하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 후 본격화 및 하반기 중 법제정 예상됨.
- 행안부는 시행령 제정, 조직구성안, 2027년 사업, 예산안 준비를 위한 민관공동 준비TFT 구성(20명)
- 시민정책참여 / 민주시민교육 / 숙의공론 / 시민사회활성화 4개 분과 구성 (시민사회활성화분과에 YWCA 참여 중)
- 6.3지방선거에서 서울, 광주, 경기, 충북, 울산, 세종 등에서 시민참여기본조례 및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기구 정책제안활동 진행, 당선인들과 지역별로 인수위 참여 등 구조 논의 중

1.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2) 법안 구조 주요내용

1 시민참여의 권리와 사회적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2 시민참여 정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지원 예산확보 의무 명시

3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숙의공론화 촉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4 이를 위한 자문기구, 지원기구 등 설치 근거 마련

5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5년간 한시적 존속 등, 40명 이내로 이중 민간위원 과 반수 이상, 2인의 상임위원제도)

6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소위원회 설치

1.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3) 향후 과제

지자체별 민관협치구조 마련 및 실질적 협력거버넌스 체계 구축

일부 참여열성층 중심구조의 한계, 참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 마련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과정, 정책 속의 역량 강화

시민참여촉진을 위한 기반마련, 기본계획수립 등 지자체의 의무 실질적 이행 촉진하고 모니터링

2. 민법 제32조 개정운동

1) 배경

사회적 공감대

YWCA 재구조화 사례를 통해 법개정의 필요성의 사회적 공감대 마련

위헌심판

민법 제32조의 위헌심판 개시, 법무부의 민법전면개정 작업 중

역사적 기회

66년 동안 유지되어온 비영리법인의 법체계의 기초를 변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YWCA 정책

→ 2026~2027 YWCA운영정책!

2. 민법 제32조 개정운동

2) 현황

- 한국YWCA연합회 『공익법인제도개선 YWCA추진단 구성』 (이희숙이사)
- 4.1. 위헌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긴급 국회토론회 개최
- 민법허가주의개정 네트워크 결성



2. 민법 제32조 개정운동

허가주의 VS 준칙주의

규제강도	유형	설립방식	적용국가
★★★★	허가주의	주무관청의 재량	한국, (구)일본
★★★	인가주의	법률상 요건+주무관청 인가절차	(구)독일
★	준칙주의	법률상 요건	일본, 호주, 독일 등
	자유설립주의		스위스

아시아 국가 공익법인 규제기관의 개수 비교 (2025)

한국

43

(중앙부처 43곳, 광역지자체 17곳, 기초 226곳)

대만, 홍콩

3

규제기관

2. 민법 제32조 개정운동

3) 운동 목표 및 계획

	과제	YWCA 역할
목표1 사회적 관심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민법허가주의 개정네트워크 조직민법 제32조 위헌성 문제 시민사회 홍보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촉구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네트워크 조직 및 운동 주도권역별 공론장 개최헌법재판소 위헌심판관련 모니터링 및 지원활동
목표2 시민사회 대안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련 토론회 개최시민사회의 대안입법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네트워크 소속 단체 및 국회협력 통한 토론회 공동참여시민사회 대안 입법연구용역 (재단법인 동천 협력)
목표3 민법개정	법무부, 국회 등 민법개정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 국회시민정치포럼, 법무부 간담회 추진
목표 4 시민사회활성화 제도기반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민사회, 공익법인 관련 법제도개선 운동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세법, 기부금품법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민참여기본법,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준비과정 모니터 링, 제도기반 구축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

권역별 공론장 운영

목적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주무관청제의 제도상 문제점 시민공론 형성

대상

비영리 공익법인, 시민단체활동가 및 정책입안자, 연구자 등 50명 내외 (지역별)

시기

2026년 11월 30일까지

주관 및 장소

주관하는 회원YWCA에서 선정

권역별 공론장 운영 — 순서 (안)

시간	구분	주관	내용
10분	개회	주관Y	대표인사, 사회
50분	기조강연	연합회	기조강연 YWCA공익법인추진단 이희숙 단장 또는 위원 송윤정, 전규해 (민법 제32조 위헌소송 대리인단)
50분	소그룹토론	주관Y	1. 주무관청 허가제도로 인한 실제 문제사례 나눔 2.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의 실천 과제
30분	전체토론	주관Y	사회 (그룹별 토론결과 발표, 질문사항 등)
	마무리	연합회	총평 / 답변 등

권역별 공론장 운영 — 역할 분담

회원YWCA 역할

- 주관회원Y 사무총장은 YWCA제도개선운동추진단 위원으로 회의참여 (온라인, 연간 2~3회)
- 공론장 홍보, 지역참가자 모집
- 퍼실리테이터 모집(5인이내)
- 공론장 진행
- 공론장 토론 기록 및 후기 공유

연합회 역할

- 기초강연 강사 섭외, 전체 당일행사 시나리오, 행사 자료집 원고 제공
- 퍼실리테이터 온라인교육, 퍼실리테이터 시나리오
- 언론홍보
- 공론장 예산지원
- 총 100만원 (퍼실리테이터 수당 10만원×5명 = 500,000원, 진행비 500,000원)
- 강사료 및 교통비는 연합회에서 직접 지출

2026 YWCA 의료소비자운동 시범 사업



1

사업 안내

사업명: 2026 YWCA 의료소비자운동 시범 사업

지역사회 의료 문제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회원YWCA와 함께 지역 기반 의료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 1 신청 대상: 2026 YWCA 의료소비자활동가교육 참여 회원YWCA
- 2 사업 기간: 2026년 7월~11월
- 3 신청 기한: 2026년 6월 30일(화) 17:00 (공문-Y-net 참고)
- 4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2

사업 안내



선정 기준

지역 운동
주체 역량



지역 운동
실천 역량



지역 사회
연결성



지원 내용

표준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 지원



시범사업 자문
(교육, 캠페인 등)



예산 지원
(최대 200만원)



<공지사항>

1. 3분기 이슈브리핑 : 9월 18일(금) 1:10
 2. 2026 한국YWCA정책협의회 : 10월 15일 서울여성프라자(대방동)
 3. 우리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발간 : YWCA 100년 다시 묻고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